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35
----------	------

발의연월일 : 2024. 9. 2.

발 의 자 : 윤한홍 · 권성동 · 김상훈
서일준 · 주진우 · 박수민
조지연 · 최수진 · 엄태영
김도읍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고질적인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임.

부당특약 설정 시 원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이 가능하나 계약당사자 간 민사상 효력은 여전히 유효해 부당특약 이행 의무가 잔존하고, 원사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등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하도급계약의 부당한 특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으로써 부당한 특약이 설정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안정성 확보와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4제3항 신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특약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u> <u>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u> <u>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u> <u>여 무효로 한다.</u>